

시론



오수열
조선대 명예교수
광주유학대학 학장

포스트탄핵시대의 정치와 정치인들의 착각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되었고,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게 인식시켜 주었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러한 대역의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엄격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촛불혁명의 열기 속에 높은 지지를 받으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5년 단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처럼 변화된 국민들의 정치감각과 수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국민들은 여야를 떠나 정치인 모두에게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하고 있는데, 촛불에 함께한 자기들에게는 관대할 것이라는 착각이 국민들에게는 오만과 심판의 대상으로 비추어 졌던 것이다. 어떻게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신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제 관심을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로 돌려보자. 새롭게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집권 3개월 만에 지지율 20% 초반대 추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지지를 추락은 어느 시점에서 멈추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음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의미와 같은 지지율 추락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언론에서는 인사문

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단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즉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집권에 성공하였다'는 착각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지난 대선의 결과는 집권기간 내내 '내로남불'로 일관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식상함에 부도산정책의 실패가 더해졌을 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라면, 모든 정치의 근본을 국민들에 대한 겸손과 성실한 태도에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제 국민들이 무조건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착각한 데에서 지지를 추락은 시작된 것이다. 지난 정부가 많이 잘못하였으니, 우리는 그보다 나은 정부에서 이보다 나은 장관 후보 보았느냐'는 해괴한 발언으로 나타난 셈이다.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복(public servant)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은 국회에 의해 견제되고 감시받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독단적 권력의 행사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5년 간의 많은 실정(失政)으로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윤석열 정부가 주저앉으면 정권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착각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아직까지 만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업 위주의 1차산업시대와는 달리 정보·통신 위주의 3차산업시대를 거쳐, AI와 메타버스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의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이미 '느긋함'보다는 '변화'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지지(支持)했으니 끝까지 밀어준다'는 것 보다는 나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이 요즘을 신세대들의 보편적 정치의식인 것이다.

바라건대, 우리 정치인들이 이념과 지역에 따른 '정치적 생존'이라는 기존 착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젊은 세대의 현실적 정치행태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삼복지절(三伏之節)의 무더위 속에서 살인적인 고물가(高物價)에 지쳐가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넘어 짜증을 안겨주는 정치가 되기를 기대하며 착각에는 반드시 후과(後果)가 따른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세월의 속도가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미래를 설계하며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고, 거기가 과거를 회상하며 지내고 있으니 바로 나이 늘었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정치학 교수의 입장에서 세상을 관찰·분석하며 살기 시작한 이래 필자에게 가장 커다란 울림을 주었던 정치적 사건은 1999년의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2017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은 1961년 이래의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무너지고 진정한 의미의 첫 민주정부가 등장한 것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저항에 의해 법률적으로 파면된 첫 사례였다.

탄핵에 의한 대통령의 퇴진은 많은 면에서 이 땅의 정치문화를 크게 변화시켰는데, 무엇보다도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이 법률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정치발전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이때부터 대통령도 법 위의 존재가 아니고, 법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변신, 주민자치의 조력자

그림은 사뭇 달랐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복지관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조직화 부분에서는 마을 주민과 함께 자치활동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위기가 구를 발굴하고 도움을 주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프로그램도 특정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동아리, 자조 모임, 축제 등을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사업도 상당 부분 있었다.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지역아동센터·시니어클럽·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대상자별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세분되다 보니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정 지역의 복지사업을 대부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없었는지 염려가 많았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변신과 전환을 통해 상당 부분 제 기능을 찾아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평가영역 중 여섯 번째인 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가 있다. 정성평

가로 기관장과 직원의 면담을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 기관장의 면담 질문 중 복지관 내외부 환경변화, 복지관의 비전 등에 대한 질문이 있다. A 복지관 관장에게 복지관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이제 복지관의 핵심 키워드는 '마을'입니다. 복지관은 마을에 대한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마을의 비전을 세우고, 마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은 마을 소통팀, 마을 성장팀, 마을 활력팀으로 조직부서명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깜짝 놀랐다. 주민자치하면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 속에서 주민이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자체가 얼마 만큼 도움을 줄 것인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런데 복지관이 주민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 조직화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수년 전부터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민자치의 조력자로서 복지관을 다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민자치의 가교역할을 하는 복지관으로 새로운 관점으

로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한편 일부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 사업을 수위탁하고 있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푸드뱅크 등 지자체에서 수위탁을 받아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복지관 본연의 3대 기능은 사례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조직화이다. 복지관이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다 보니 복지관의 3대 기능 외에 지자체 사업의 전달체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와 긴밀한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어 복지관의 모습이 달랐다.

주민자치 성공의 핵심 키워드는 주민과 자치이다.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본질이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주인으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지자체들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은 자치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 만약 지자체들이 복지관의 조직화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면 주민자치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주민자치의 조력자, 가교역할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치칼럼



김용민
송원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 회장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평가받게 되어 있다.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필자는 사회복지시설평가 위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3년간 복지관의 ① 시설·환경 ② 재정·조직 ③ 프로그램·서비스 ④ 이용자의 권리 ⑤ 지역사회관계 ⑥ 시설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이다. 그동안 복지관이 대표적으로 제시할 만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5개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 받는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 교과목은 특정 대상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복지관 현장에서 진행되는 프로

현장칼럼



최근하
담양소방서 현장지휘단 1팀장

담양소방서 관내 화재 출동 신고의 절반 이상이 오인 출동인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오인 신고가 잇따르면서 실제 화재에 대한 출동력 공백·출동으로 인한 인력과 연료비 등 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과파됐다.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담

양소방서 관내에 접수된 전체 화재 신고 건수는 798건으로, 실제 화재는 155건(19.4%)이 발생했고 나머지 643건(80.6%)이 오인 출동으로 분석됐다.

오인 신고 중에는 자속 등 비상경보 오작동 337건(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부산물소각 등 연기 발생 173건(26.9%), 기타 104건(16.2%), 차량화재 오인 17건(2.6%), 화재 미발견 6건(0.9%), 연막소독 4건(0.6%), 장난전화 2건(0.3%) 순으로 분석됐다.

소방기본법 및 시도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와 구조·구급 신

고를 허위로 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과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해 화재가 발생하면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해 소 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부산물 등 소각 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오인 화재출동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불을 피운 사람을 찾기가 힘들며 사

회적 여론 형성이 돼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담양소방서에서는 속보설비 대상에 대한 현행화 행정 업무 실시와 현장 출동 시 관계자에게 적응성이 있는 화재 감지기 설치를 계도하고 있다.

법적 단속보다는 주민들이 솔선수범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의식 생활화가 필요하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경제성에 밀려선 안돼

광주시는 도심부의 교통 혼잡 완화와 광역 도시권 이동 편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도시권 방사형 3순환고속도로의 간선망 구축에 주력해왔다. 나주 급전-광주광산 분량 간 제1구간(15.5km)과 장성-담양 제3구간(25.3km) 건설이 완료됐으며 분량-장성 간 제2구간(9.7km)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국토교통부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급전-화순 제4구간(18.6km)이 신규 반영되면서 기대가 적지 않았다. 4구간은 빛가람혁신도시, 광주 남부권 접근성 제고, 주변 산업단지 물동량 수송 지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각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와 교통량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기준 '1.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돼 후순위로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정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는 입장이나 녹록치 않다. 전국에 '우선사업'으로 분류된 고속도로가 많아 정부가 '일반사업'인 급전-화순 구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모든 편익이 돌아가게 된다며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위의회에서 국가 지원형 복합소방물 유지, 인공지능 2.0+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등과 함께 제3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산 지원을 13가지 주요 현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예타조사비 명목으로 국비 50억원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인접해 있는 5개 시·군, 나주·화순·담양·함평·장성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200만명 인구를 보유한 30분 생활권의 빛고을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 계획대로 제3순환도로 4구간이 2024년 실시설계 등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총사업비 1조521억원(전액 국비)으로 오는 2033년까지 정상 추진돼야 한다. 예타를 구실로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광주시는 총력전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또 모욕한 99엔의 나라 일본

일본연금기구가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정신영 할머니의 계좌로 99엔을 입금했다. 탈퇴수당 명목이며 환화로 환산해 931원이 찍혔다. 연금 규정에도 그렇듯 77년 전 당시 물가로 환산해 화폐까지 변동을 고려해야 했음에도, 예외였다. 숨기기에 급급하다. 마지못해 내놓은 것으로 악의적인 모욕이다.

탈퇴수당은 한국으로 귀환할 때 지급해야 하지만 일본은 이 사실조차 감춰왔다. 정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11명이 지난해 3월 연금 가입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록이 없다고 발뻠해오다 연금번호까지 알고 있던 정 할머니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전에도 일본은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에게 99엔을 지급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4년 연금 기간이 더 길다며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에게 199엔을 보낸 바 있다.

피해자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일본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쓰비시의 현금화(강제매각)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방해 행위로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불응도 안 되는 목숨값 99엔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발입금을 전면 공개,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사례를 비교하면 상응한 화폐가치를 반영해 지급할 규정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변명이라며 꼬집었다. 피해자들은 고령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쇠처럼 두꺼운 낫을 한 가승스러은 절면피다. 당장에 일본과 전범기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타깝다.

사과 한마디 듣는 것이 유일한 소원인 피해자들은 다시 마주한 참담한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구실로 비굴하게 행동하는 듯한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 피해자를 희생양 삼는 것이어서다.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형님꼴이라 망동을 부리는 그들이. 저자세 외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가오는 8·15 광복절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호해야 한다.

아침은은 詩

칸나

이희정

태양이 낳은 파편들이 꼬리가 물렀다
직립을 뿌리에 걸고 쿨럭이는 저 행렬
마침내 가닿은 붉은 별
심장은 불을 끄는다



폭염이 진동하는 칠월에 생을 띄워
제 몸보다 뜨거운 축제장을 배회하다
단 한 번
회억조차 버려 버리는
눈부신 상처

(시집 '내 오랜 이웃의 문장들', 시인동네, 2022.)

[시의 눈]

저수지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한 오두막이 나옵니다. 영감님 내외가 두부를 만들어 파는 그 집엔 울타리 방 둘러 칸나가 우거졌습니다. 무성한 칸나 숲이 되기까지 그 정성은 대단했지요. 물과 거름은 물론, 키 큰 칸나가 넘어지지 않게 대나무를 각각 세워 놓았대셨어요. 현대 칸나의 불꽃은 사실 누나였습니다. 꽃이 '불'을 그을 때 누나는 '쿨럭'여 대곤 했지요. 그러면서 캔버스에 가득 칸나꽃을 앉혔습니다. '축제장'의 불꽃이 '화약고처럼 터지'는 무렵 누나의 결핵은 핏빛이었습니다. 칸나꽃으로 미어진 가슴을 아찌 견뎠을까요. 동구를 떠나며 쓴 각혈이 이 여름에 오버랩됩니다. 누나의 꽃에 박힌 내 붉은 울음도 거기 담겼지요. 그후 불꽃은 도시로와 오래된 아파트처럼 천천히 희색이 되고 말았구만요. 칸나가 있던 자리엔 폭염의 꽃이 무성합니다. 이희정 시인은 경남 김해에서 나. 2019년 경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그는 시의 생각을 또다른 시로 바꾸어 재의미화하는 그 객자 속 파수꾼을 즐겨 등장시키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 역 특 집 부 650-2060 광 고 문 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광 고 국 650-2072 광 고 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 영 지 원 국 650-2010 편 집 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기 획 사 업 국 650-2079 입 무 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 울 지 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